‘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 조성 해달라

광주·전남·전북, 대선공약 채택 공동 요구

원전 22기 황해권 안전·연구 체계적 관리

영광원전(6기)과 중국 원전(16기)들이 황해권에 몰려 있어 전남지역이 원전 사고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광주일보 15일자 1면〉와 관련, 전남도·광주시·전북도가 사업규모 1조원대의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최근 영광원전 사태로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들 지자체는 체계적인 원전 안전과 관련 연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유력 후보 캠프에 공동 요구했다.

전남도는 18일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유력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는 국가방사선진료센터, 방사선산업안전연구소, 방사능 분석, 교육훈련 등 4대 핵심사업을 맡게 되며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단됐던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과 최근 전남도가 국회에 건의한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의학 등 방사선 ‘연구’ 분야와 방제·구호 등 ‘안전’ 분야를 함께 묶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방사선 연구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안전 분야는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아 따로 추진돼 왔었다. 최근 연구 분야인 ‘서남권한빛생명과학기술원’ 건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5억원이 2013년 국가예산에 포함되는 등 연구 쪽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전 분야인 방사선안전의학센터 등을 갖춘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사선을 연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곳이다. 설립에는 총 57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 진단 기술, 신약 개발 등 연구 분야와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안전 분야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대권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권에는 영광원전 6기 외에 중국이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가동하고 있고 7기를 추가 공사 중이어서 전남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복입으면 올 겨울 춥지 않아요”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는 17일 광주시청 야외문화광장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내복입기’ 자전거 대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이 내복입기에 동참을 호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원전 5·6호기 연내 가동 가능

지경부 “내달 중순 교체 마무리…3호기는 내년 1월”

영광원전 3호기는 연내 가동이 힘들고, 5·6호기는 빠르면 연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를 최대 320만㎾ 줄이기로 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16일 “원전 영광 5·6호기 부품 구매가 거의 마무리됐고, 부품 교체 작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해 중순께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부품 교체 완료 후 규제 기관의 안전 검증을 거쳐 지역민들을 설득하면 예상보다 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내 가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그는 “제어봉 안내관에 금이 간 영광 3호기는 연내 가동이 힘들고 내년 1월에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예년보다 심한 한파로 동절기 전력수요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복,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를 최대 320만㎾ 줄이고, 신규 발전소 조기 가동 등을 통해 127만㎾의 전력 공급원 추가 확보에 나선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절기에 산업체 위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내년부터 전력수요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할증료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계약전력 100~3000㎾인 6000여개의 전기 다소비건물은 실내 온도 20도 이하,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를 의무적으로 유지토록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무진로~소촌산단 연결도로

내일부터 일부구간 부분개통

광주시는 18일 “무진로에서 소촌산단 연결도로 중 260m 구간을 20일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 준공예정인 소촌산단 외곽도로는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총 513m를 개설하는 공사다.

광주시는 소촌산단 도로 폭이 협소해 물류차량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소촌산단 입주업체들의 민원에 따라 확장공사에 나섰다.

소촌산단 외곽도로가 개통될 경우 산단내 교통 분산에 따른 차량 흐름과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軍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이전 주변지역 주민 희망땐 외투지역 지정”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 등을 참조,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 주민이 원할 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외국인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가 조세감면·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민간공항은 고속철도(KTX) 오송-광주 구간이 개통되는 2015년에는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며 KTX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2007년 11월 개항 이후 누적 적자가 345억원에 달하는 무안공항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는 군용비행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은 김 의원이 200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CCTV관제센터 입찰 무효 확정…재입찰

광주시가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빠르면 이달내 범죄예방과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등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42억9300만원을 들여 기관별로 운영 중인 CCTV 1512대를 통합하고 532대를 신설하는 사업에 대한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관련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 SKT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2순위로 선정했으나, KT측에서 ‘입찰공고 등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내 1년이 넘도록 사업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와 KT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각각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무효가 됐다. /박진표기자lucky@

대형마트 10시 폐점·월 3일 의무휴업

지경위 유통법 개정안 통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나로호 부품 고흥 입고…28일 전후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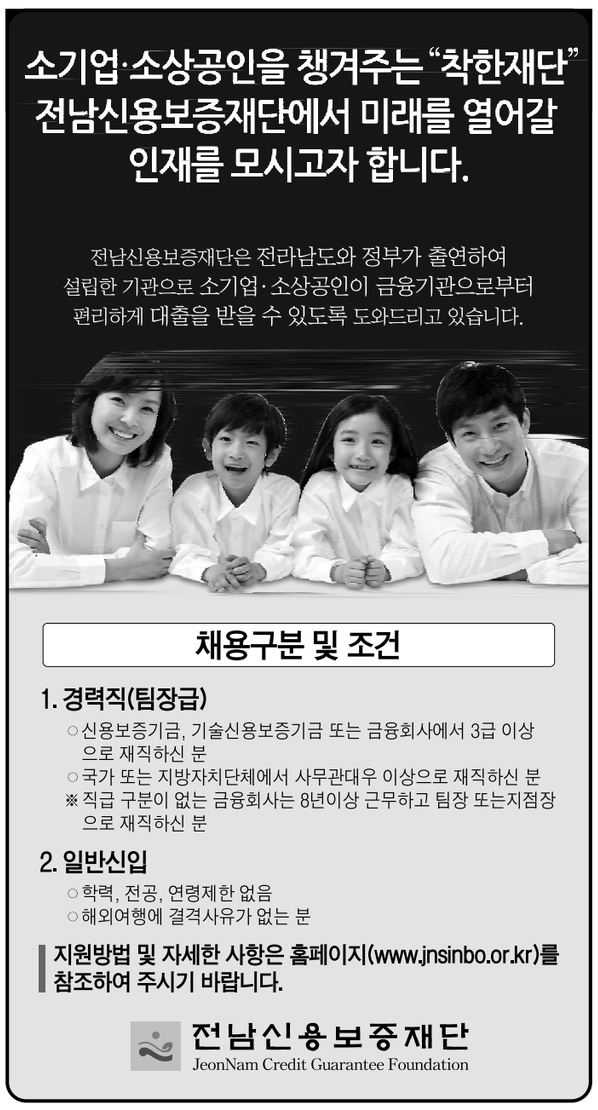
나로호 3차 재발사에 쓰일 부품이 러시아에서 고흥나로우주센터로 이송돼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또 나로호발사관리위원회가 20~21일 열릴 것으로 보여 발사 예정일은 28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나로호 3차 발사 연기의 원인이었던 ‘어댑터블록(소형엔진 연료분배장치)’의 국내 이송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어댑터블록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국내 통관절차를 거쳐 오후 10시께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됐다.

나로우주센터에선 16일부터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들이 전기시험 등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으며, 새 어댑터블록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또 “다음주 중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을 정할 것”이라면서 “애초 이달 9~24일까지를 발사예정일로 잡았으나 어댑터 블록의 입고가 늦어지면서 23~30일 사이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사 예정이었던 나로호는 발사 직전, 헬륨가스 공급 과정에서 어댑터 블록 접합부에서 밀봉용 링 모양 고무 실링(seal)이 찢어져 발사가 중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